

# 체험 마을 자매 결연 1사 1촌 운동

체험마을사업과 자매결연, 1사1촌 운동 등의 도시와 농촌 교류사업을 본격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도농(都農)교류 사업을 한층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9일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와관련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都農 교류 사업 원활해진다

### 교류촉진법 국무회의 통과... 지방 세제 감면·금융지원 내용 담아

출한 뒤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지역농협 등은 이 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역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을 확정해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부분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 가운데 제약을 받아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출한 뒤 올해 정기국회 기간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지역농협 등은 이 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지역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을 확정해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부분 등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 가운데 제약을 받아왔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어촌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환경개선부담금 조정금액

배기량	차량	환경구역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
2천cc 미만	4년 미만	104,039	68,000	65,960	53,720	27,200
	8년 이상	116,524	76,159	73,875	60,166	30,464
2천~2천500cc	4년 미만	130,049	84,999	82,449	67,150	34,000
	8년 이상	145,655	95,199	92,343	75,207	38,080

## 개정시연 부담금

배기량	차량	인구수				
		500만 이상	100~500만	50~100만	10~50만	10만 미만
2천cc 미만	3년 미만	52,020	34,000	29,580	28,900	13,600
	3~4년 미만	104,039	68,000	59,160	57,800	27,200
	8~10년 미만	116,524	76,159	66,259	64,736	30,464
	10년 이상	120,686	78,879	68,625	67,048	31,552
2천~2천500cc	3년 미만	65,025	42,500	36,975	36,125	17,000
	3~4년 미만	130,049	84,999	73,949	72,249	34,000
	8~10년 미만	145,655	95,199	82,823	80,919	38,080
	10년 이상	150,857	96,599	85,781	83,809	39,440

# 3년 미만 경유차량 환경부담금 50% 감면

내년부터 경유차 중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 3천cc이하 소형 화물차의 경우 25%가 감면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월 1일부터 제작한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유로-4 수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한 3년 미만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의 50%를 깎아주는 반면, 매년 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된 차량은 기존보다 3.5% 더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유로-4’기준에 맞는 연식 3년 미만의 서울지역 2천500cc이하 레저용 차량의 소유주는 연간 6만5천원을 감면 받지만 10년 이상된 레저용 차량의 소유주는 연간 5만2천원을 더 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노후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국고지원으로 달아주고 3년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신차와 경쟁성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또 인구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별 오염수준을 환경개선부담금에 반영키로 해 춘천시·제주시·청주시·창원시·전주시·속초시·계룡시·서귀포시 등에서는 부담금을 종전보다 적게 받는다.

반면 안양시·성남시 등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하 23개 시는 수도권 대기관리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10% 정도 더 부과한다.

# “반도체 경기 내년엔 좋아진다”

###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9일 반도체 시장 전망과 관련,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낙관론을 내놨다. 윤 부회장은 이날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2007 한국전자전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만큼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며 “반도체 사업은 내년에는 컨슈머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3·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희망한다”고 짧게 말했다.

은 대형 TV 사업에서 LCD와 PDP TV의 비율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60대 40 정도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행사 이후 윤 부회장은 이 말에 대해 “70-80%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PDP TV는 대형 TV 시장 위주로 공략하고 LCD TV는 30인치 대 등 중소형 TV 시장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막오른 한국 전자전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한국전자전 행사장에서 전자기제품을 본뜬 막오른 어린이들이 ‘항공돌 발삼 모양’을 한 모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시회는 국내외 전자업체들이 출품한 전자제품들이 선보이며 13일까지 계속된다.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된 한국전자전 행사장에서 전자기제품을 본뜬 막오른 어린이들이 ‘항공돌 발삼 모양’을 한 모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시회는 국내외 전자업체들이 출품한 전자제품들이 선보이며 13일까지 계속된다.

# “증권사 신규 설립 기준 이달중 마련”

###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부위원장은 9일 “이번 달에 증권사 신규 설립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연내에 증권사 신규 설립이 가능해 지면서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의 개편과 경쟁, 인수·합병(M&A)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증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가치 검토할 점이 있다”며 “현재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해지금의 도입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다음달 정도면 나올 것”이라며 “연말에 공청회를 열어 도입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보험사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과 관련, “여성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카드를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거절 사례가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파악 중”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올 4·4분기부터 은행의 경영 실태 평가 때 사회공헌 활동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내년 환율방어 누적 손실 규모 31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의 내년 누적손실규모가 3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내년 말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잔액이 99조4천400억원에 달해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4조7천9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조달과 달러유출 등으로 인한 구조적 금리 역마진에 따른 이차손실과 환율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등으로 지난해까지 누적손실 규모는 26조346억원을 기록했다.

또 재경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당기순손실은 각각 2조6천766억원, 2조3천659억원 등으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회 재경위가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심회에 따라 원·달러 환율을 920원으로 가정해 산출한 것으로

# 국민연금 불신키우는 政府

### 국고지원 대폭 삭감... 관리비 국민에 떠넘기기 공무원 연금은 보조금 크게 올려 형평성 논란

정부가 특별한 원칙 없이 내년에 갑자기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은 대폭 줄이면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지역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크게 올리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제희 의원(한나라당)과 장복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5%만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공단 관리운영비 3천772억7천800만원에서 국고 지원금은 188억6천4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인 3천584억1천400만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그 만큼 국민에게 재정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86.2%(1천181억90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1988년 최초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공단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왔다. 제도시행 초기 4년간(1988~1991년)은 100% 지원했으나 이후 국민연금기금이 일정부분 쌓인 뒤부터 지원액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1992~1994년엔 49%(125억~158억 원), 1995~1997년 67%(413억~575억 원), 1998~2002년 57~58%(902억~1천355억 원), 2003년 53%(1천440억 원), 2004년 40%(1천191억 원), 2005년 39%(1천274억 원), 2006년 38%(1천331억 원)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공단 관리운영비 3천604억5천500만원 중에서 38%인 1천369억원을 국고지원했다. 공단 국고지원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정부가 내년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새로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단 관리운영비 재원분담비율을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예산을 갑자기 삭감한 탓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다른 특수지역 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보전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대폭 올려 국민의 지탄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꼬집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내년엔 올해(9천725억 원)대비 30.4% 증가한 12조2천684억원을 국고지원할 예정이다. 사학연금공단에는 2007년(3천789억 원)과 비교해 27.1% 늘어난 4천815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다른 지역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늘리면서,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대폭 삭감해 국민연금공단 운영비마저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스피 2014.13 ... 최고치 경신

코스피시장이 장중 최고치는 물론 종가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31포인트 오른 2014.13으로 마감했다. 이날 증가는 지난 2일 기록한 사상최고기 2014.09를 0.04포인트 넘은 사상 최고치다. 아울러 이날 2022.87까지 오르면서 전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2022.01)도 경신했다. 장 막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것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끌었다. 프로그램은 1천48억원의 순매수로 마감했다. 거

래매금은 소폭 감소한 7조3천438억원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812.80으로 장을 마치며 전날보다 3.67포인트(0.45%) 하락했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 인출액의 순매수를 잡고 1천723억원의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투자자가 444억원의 매도우위를 보였다. 개인만이 1천366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전자가 2.54% 하락한 53만7천원 이상 마감. 52주 신저가인 52만5천원을 위협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7.85%로 낮아지면서 1999년 7월13일 이후 처음으로 7%대로 추락했다. 반면 포스코는 1.73% 오르면서 70만5천원을 넘어섰으며 시가총액도 61조원으로 삼성전자와의 차이를 18조원이내로 좁혔다. 그러나 이날 오른 종목은 307개로 내린 종목 500개보다 적어 제각각은 낮았다. 다만 숏고르기가 지수 2000 이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가 많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방카슈랑스’ 백지화 법안 제출 은행-보험 힘겨루기 본격화 될 듯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4단계 방카슈랑스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보험사들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은행들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9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내년 4월로 예정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도 이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방카슈랑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모집창구를 은행업무창구와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모집 조직의 대량 실업 사태는 물론 부실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실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승용차 어린이 보호 좌석 부착장치 올 연말부터 설치 의무화

올해 말부터 승용차에 어린이 보호 좌석부착장치 설치 의무화된다.

9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유아보호용 시트를 승용차 좌석에 연결시 좌석안전띠를 이용했으나 느슨하게 장착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규격화된 부착구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설치하게 했다.

이에 따라 유아보호용 시트의 장착 오류가 줄어들고 충돌 안전성이 향상돼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자나 승차 또는 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시경을 설치해 운전자가 식별하지 못하고 출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가 곡선도로 주행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조등(AFS) 기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화재시 피해소스를 위해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했다.